

Global Goings~on

* 주요국의 보건복지 정책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연구 자료를 선정하여 번역 정리한 글임.

How might the UK pensions landscape evolve to support more flexible retirements?

■ Melissa Echaler, Mel Duffield, Sarah Luheshi, *Pensions Policy Institute*, April 2015.

이 보고서는 미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총 4개국과 영국을 비교하여 영국 은퇴 시스템과 영국 연금이 진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연금 시스템은 국가연금,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사회보장비용, 게다가 서로 다른 연금 과세제도 등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부정확하지만, 영국을 위한 몇몇의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낮은 수준의 국가연금은 일반적으로 개개인들이 은퇴 후에 다른 수입원전을 요구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영국에서 건강관리비용의 부재는 은퇴기간동안 연금저축이 정기적인 수입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 중의 하나를 제거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몇몇의 경우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비교하여 영국의 DC연금의 인출은 과세대상이 된다. 개략적으로 미국에서 세율은 많은 개인들이 그들의 연금을 점차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높은 한계 세율을 피하기 위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은 미국과 호주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인기 있지는 않다. 연금구입의 방해요소로서 연금전환 전의 부, 규제, 유산의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연금에 대한 규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 특히 호주와 비교하여 영국의 규제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떤 면에서 영국 DC시장은 해외 시장과 중요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 연금 산업은 장수 리스크, 시장 리스크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대한 세련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변화하는 환경에 투자와 위험분산전략을 제공하는 사회기

반시설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영국의 몇몇 연금화에 대한 장벽의 부재이다.

새로운 연금 유연성은 급격하게 영국DC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며, 국제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영국의 규제 초점은 지침의 일관성과 질을 보장하는 표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예를 들어 호주는 현재 장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에게 기본적인 은퇴자금을 보장하는 법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에서 은퇴 후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조치로 고려되어야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경험은 정부가 결과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한다. 국가연금의 변화, 세금변화, 규제, 금융 상품 판매규제, 가이드나 충고 등으로 영국의 연금시스템을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마무리 짓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영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하여 영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있고 있다.

Measuring retirement savings adequacy : developing a multi-pillar approach in the Netherlands

|| Marike Knoef, Jim Been, Rob Alessie, Koen Caminada, Kees Goudswaard and Adriaan Kalwij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ance, June 2015 1-35*

연금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들이 많다. 그 중 네덜란드는 적정성 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이 순위는 중위소득자들의

가상 소득대체율을 기반으로 평가되어진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네덜란드 연금시스템의 적정성의 순위가 높지만 실제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축적한 연금을 확인하기 위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산출한 결과는 연금저축 적정성은 상당히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이 결과는 가상의 소득대체율을 기반으로 한 연금 시스템 적정성 평가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은퇴기간동안 사람들이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은퇴기간동안 재정적인 자원은 1년에 평균 33,000유로이며 27,000유로의 중앙값을 가진다. 젊은 세대는 직업연금(occupational pension)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전세대는 개인의 부와 부동산을 축적하고 있다. 개인의 부와 부동산은 중앙 소득대체율을 상당히 많이 올린다. 공 사적 연금의 총소득대체율(gross replacement rate)의 중앙값은 71%를 나타내지만 모든 연금을 생각하면 83%로 증가한다.

이 연구에 사용되어진 데이터는 자영업자와 같은 몇몇 취약한 그룹도 생각 할 수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는 직업연금은 낮지만 높은 자발적인 연금과 개인저축 및 부를 가지고 있다. 전체 연금은 약 30,000유로 정도의 중앙값을 가진다. 자영업자 말고도 1세대 이민자, 실업자나 장애 혹은 사회 보조원와 있는 가정도 취약그룹으로 분류된다. 1세대 이민자나 사회 보조원과 함께 있는 가정은 거의 대부분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반면에 실업자나 장애인과 함께 있는 가정은 종종 개인적인 부를 가지고 있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

고 있다.

이 연구는 은퇴저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네덜란드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한 첫 연구이다. 하지만 결과를 해석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밝히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네덜란드의 통계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현재 직업에서 은퇴나이까지 고용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둘째, 추가적인 사적연금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은퇴시점의 노후소득에만 관심이 있다. 그이후에 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넷째,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뮬레이션은 결정론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내재되어있음을 강조하면서 연구를 마무리 짓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는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네덜란드의 실제 은퇴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Assessing the impacts of alcohol policies: A microsimulation approach

■ Cecchini Michele, Marison Devaux, Franco Sassi. 2015. No. 80. OECD Publishing.

본 보고서에서는 음주 정책(alcohol policy)은 음주와 관련된 피해를 억제하고, 건강 개선, 생산성 증가, 범죄 및 폭력 감소, 정부 지출 감소 등 중요한 가능성을 가지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WHO Global Strategy는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

이기 위해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정책들을 제공했다. OECD는 음주 정책 효과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모의실험 접근법으로 이를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모델링 접근법, 입력 자료(input data), 분석에 대한 가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캐나다, 체코공화국, 독일의 가격 정책 및 규정, 법률, 교육, 보건 정책을 평가하였다. OECD 분석의 결과는 다음을 보여준다. 건강에 대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음주를 과다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간단한 의료적 조치(health care intervention)를 취하고, 음주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금 인상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이끌었다. 음주에 있어서 의료적 조치를 취하거나 법률적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반면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덜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정책은 음주와 관련된 장애(disability)를 예방하고, 근로 연령에 포함된 사람들의 근로 시 부상을 예방하고, 이들의 근로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 결과로서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음주 정책은 보건 관련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의료적 조치와 음주 단속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이지만 이러한 정책은 매우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The Health Consequences of Adverse Labor Market Events: Evidence from Panel Data

■ Johanna Catherine Maclean, Douglas A. Webber, Michael T. French, Susan L. Ettner. 2015.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54(3). pp.478-498.

이 연구에서 고용(employment)은 본인의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건(adverse labor market events)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노동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사건은 동료들 사이의 문제, 고용변화, 금융 스트레인(financial strain) 등이 있다.

연구를 위해 종단면 자료(longitudinal data)를 활용했으며, 이 자료는 National Epidemiological Survey of Alcohol and Related Conditions에서 25세~64세 사이의 남녀를 대상으로 표본을 얻었다. 분석을 위해 자료의 범위, 변수 설정, 그 외에 자료를 정제하는 기준과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측도로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 두 가지를 측도로서 사용하였다. 또한, 수입, 가구 등 분석을 위해 통제해야 할 변수인 통제 변수(control variable)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모델을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는 특정 시간에서의 개인의 건강, 부정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벡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 특성, 조사의 고정효과(fixed effect), 개인 고정효과, 오차항 등이다.

연구 결과로서 동료들과의 문제, 고용 변화, 금융 스트레인과 건강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남자는 각각 3.1%, 0.9%, 4.5% 만큼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고, 여자는 각각 3.3%, 0.2%, 5.1% 만큼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다. 하지만 육체적 건강은 정신 건강만큼 고용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및 가정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다.

The Welfare economics of infectious happiness

Richard Povey, *Economic Letters*, 133(2015), 1-3.

저자는 행복이 전이된다(infectious)는 것이 최근 실증적 근거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행복의 경제학(happiness economics)에 대한 선행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으므로(voluminous), 이를 모두 밝히는 것보다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연구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복의 경제학의 시작은 Easterline(1974)에서 비롯되는데, 즉 본 연구의 내용은 비록 1인당 GDP와 행복과의 장기적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삶의 만족도의 기록된 수준(reported levels of individual life satisfaction)은 소득수준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두루 수용되고 있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e paradox)의 해법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사실상의 소득과 정(+)의 관계에 있고, 비교 그룹(지역, 국가, 국가 간)의 참조 소득과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저지들은 다음으로 이러한 행복 함수를 경제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일련의 기제로 해석한다면, 중요한 함의 중 하나는 개인들이 분권화된 균형에서 노동을 과잉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의 전이 가능성은 최근에서야 연구된 시안으로서, 20년 정도 지난 심리학적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주

관적으로 기록된 행복감은 다른 사람의 행복감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이는 직장 동료, 이웃, 가족 간 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Fowler and Christakis, 2008). 반면, 이러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잠정적인 면이 있고(tentative), 어떤 밝혀지지 않은 통상적인 요소가 겉으로만 그럴싸한 허구의(spurious) 관찰된 전이 효과를 야기하는 사실에 기인한 특정적인 상황일수도 있다는 것이다(Cohen-Cole and Fletcher, 2008). 비록 공식적으로 발표된 연구는 아니지만,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중국으로 하고 방법론을 도구변수 접근법(IV approach)으로 한 Knight and Gunatilaka(2009)의 연구에서는 전이된 행복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반면, 가장 최근인 2014년 Tumen et al의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와는 반대로 대체 도구변수 접근법을 적용하고, 영국의 지리적, 직업적 그룹을 범주로 한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한 사람은 더 소규모의, 친밀한 그룹 내에서 전이된 행복을 더 쉽게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저자들이 사회후생함수(SWF)와 초과 노동 공급(excess labour supply)을 적용한 수리적 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를 간략히 언급하면, 개인이 행복의 전이 외부성을 인지하게 되면, 아울러 다른 이들의 행복 변화에 따른 그들의 행복에 대한 어떤 영향력 있는 행동의 간접적 효과를 인지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전이 효과가 없다면 그들은 일을 적게 할 것이다. 의식하는 전이성은 한 개인이 속한 그룹의 공공재에 대한 높은 기여를 낳게 되고, 부유한 이들로부터 가난한 이들로의 이타적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이 인

지는 행복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때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기타 수리적 분석과정과 연구의 한계점은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

Fertility and unemployment in a social security system

■ J.Leran Wang *Economic Letters* 133(2015) 19-23.

저출산과 실업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는 여러 국가에서 지난 수십년 간 겪고 있는 여러 당면과제를 야기하였다. 저자는 이에 다음과 같이 물음을 던진다. “두루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저출산과 관련된 실증분석 연구들은 자녀를 (가용할 수 있는) 소비재로 인식하거나 투자재로 인식하는 점이다. 소비재로 인식하는 관점인 이타주의 가설(altruism hypothesis)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는 오는 만족으로 인해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이고(Barro and Becker, 1989), 후자인 이기주의 가설(egoism hypothesis)은 부모가 자녀를 일종의 노후 소득 보장(old-age security considerations)의 도구로 본다는 것이다(Cigno, 1993).

한편, 저출산에 미치는 연금의 영향을 고려한 여러 실증적 연구들은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를 압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e.g., Cigno and Rosati, 1992 ; Hohm, 1975).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아동을 양육하는 동기는 그들의 미래의 삶이 연금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Fanti and Gori(2007)은 아동수당의 도입은 출산율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의 근거는 자본축적을 방해하고, 주어진 최소임금 수준에서의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세대중립모형(OLG)을 아동양육수당뿐 아니라 PAYG 공적 연금을 경제에 도입하여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두 가지 보조금이 내생적 출산과 실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The government), 소비(Consumption), 생산(Production), 자본시장(The

Capital market)으로 구성된 OLG모형을 적용하여 균형을 찾고 공적연금의 효과와 아동수당의 효과를 수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사회보장제도는 PAYG 연금과 아동수당 두 가지를 상정하고, 최소임금은 법적 근거에 따라 상수(일정한 것)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는 높은 수준의 연금은 출산율을 높이고,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낮은 수준의 연금은 그 반대의 결과를 야기하였고, 아동수당 역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자세한 수리적 분석과정은 논문을 참조하면 된다.